

경제위기와 프랑스의 최근 고용정책동향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④ - 프랑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경제위기에 있어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고용문제에 있어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OECD의 지난 11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7%대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실업률은 내년도에 8.2%를 넘어 2010년에는 8.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

실제로 고용과 실업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온 문제 중 하나로서, 지난 해부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프랑스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실업률의 재증가와 함께 고용분야에 있어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 통계²⁾에서는 고용문제의 상징적 수치로 여겨지는 총 실업자 수 200만 명을 18개월 만에 다시 돌파하는 등, 위기의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 OCDE, "Incidence de la crise économique sur l'emploi et le chômage dans les pays de l'OCDE," 2008.11.25(http://www.oecd.org/document/0/0,3343,fr_2649_33927_41738752_1_1_1_1,00.html 참조)

2) 정부의 연구조사 통계기관인 DARES에 따르면 10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2,004,500명의 구직자가 실업률의 기준인 카테고리1(정규직 구직자로 한 달 근로시간이 78시간에 못 미치는 자)에 등록했다. 이는 이전 달에 비해 2.4% 증가한 것이다. "Le Marché du travail en octobre 2008", 2008.11.27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IMG/pdf/PI_200810_int-7a6Y-2.pdf 참조) 한편, 국가경제통계연구소 Insee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3/4분기 실업률은 7.7%로 2/4분기의 7.6%보다 0.1% 증가했다. "Information Rapides" -n° 324, 2008.12 참조.

이러한 가운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특히 이번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정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에는 다시 세부적인 추가적 조치들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최근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새로 발표된 고용정책들의 주요 내용³⁾

이번에 새로 발표된 고용정책 중 중심이 되는 사항은 ‘직업전환계약(le contrat de transition professionnelle)’의 확대 시행과 ‘부분 실업(le chômage partiel)’ 제도의 개편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고용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지원계약(les contrats aidés) 예산 확대

우선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서 23만개로 정해진 고용지원계약수를 10만개 더 늘린 33만개로 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약 1억 5천 유로에서 2억 유로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전환계약의 확대 시행

2006년 도입된 동 계약제는 기존의 경영상 해고 전 의무절차인 개별재배치협약(la co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é)⁴⁾을 대신하는 것으로, 동 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

3)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www.premier-ministre.gouv.fr/thematique/emploi_m90 참조.

4) 근로자수 1,000인 미만 기업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단체해고시, 사용자는 해고대상근로자에게 재배치협약을 제안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최장 8개월간 직업훈련생의 신분으로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첫 3개월간은 근로계약 종료 전 1년간의 평균 임금의 80%, 나머지 5개월간은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노동법전 L.1233-65~L.1233-70 참조.

로자에게 재배치협약 대신 직업전환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동 계약 체결 근로자에게는 이후 최장 12개월간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 및 실습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재배치협약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동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는 계약 체결 이전 12개월간 근로자가 수령한 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⁵⁾

이번 고용정책 발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재배치협약을 직업전환계약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까지 7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동 계약제를 우선 경제위기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25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부분실업제도의 개편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월 25일,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잇따른 경영상 해고조치를 막기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부분실업⁶⁾ 혹은 기술적 실업이라는 기존 제도의 활용이다.

원칙적으로 동 제도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35시간 미만으로 기업활동을 줄이거나, 잠정적으로 기업활동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중단하는 경우, 단체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실업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실업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 손실을 감수하는 동시에 특별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법정 부분실업보조금은 줄어든 근로시간당 250인 미만의 기업에서 2.44유로, 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2.13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에 의해 지급되는 추가수당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는데, 특히 1968년 2월 21일자 전국단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보조금 총액이 순임금의 50%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분실업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600시간까지 가능하고, 기업활동의 임시

5) 직업전환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홈페이지 참조 <http://www.orientation-formation.fr/spip.php?article1031>.

6)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전 제 L.5122-1~L.5122-5 참조.

중단의 경우에는 연속 4주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은 바로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600시간으로 되어 있는 한도를 800시간, 나아가 1,000시간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과, 기업활동 중단 가능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조항 완화 대신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보조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합고용서비스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통합고용센터(Pôle emploi)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고용센터(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ANPE)와 실업보험담당기구(Assedic)의 합병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통합고용센터가 점차적으로 기능하게 되며, 여름부터는 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 지급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100%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타 정책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한 그 밖에 몇 가지 추가 정책을 언급했는데,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간제 고용계약의 무제한 허용과, 주일근무에 관한 입법 추진, 대인서비스산업 분야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는 특히 논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제 고용계약 허용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 평가 및 전망

이번 경제위기로 프랑스가 특히 타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 및 건축 산업이다. 이는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문제로서, 연합 차원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대처계획⁷⁾에도 동 분야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르노 자동차는 유럽 지역에서 6,000명의 감원과 4/4분기 생산 25% 축소

를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잇따라 푸조-시트로앵 역시 프랑스에서만 3,55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이번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⁸⁾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와 주택의 부가세를 낮추는 등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안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재정 문제와 연합 차원의 규제 등 여러가지 제한 상황들로 인하여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⁹⁾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 및 건축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번 고용정책 발표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 고용정책들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따르는 부담을 정부가 사회비용으로써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공공지출의 확대는 사르코지 정부가 그간 유지해 온 노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히 고용지원계약의 확대정책이 그렇다. 이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와 동시에 이미 많은 비판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이들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고용지원계약의 수를 크게 늘린다는 대책은 당장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늘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동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일정한 수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노동시장에 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화는 안정적이어야 할 노동법규 자체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도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을 강구하게 할 뿐, 그만큼의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⁰⁾

7) EU, "La Commission lance un ambitieux plan de relance pour la croissance et l'emploi, pour stimuler la demande et rétabli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européenne", 2008. 11.28(유럽연합홈페이지 http://ec.europa.eu/index_fr.htm 참조)

8) 르몽드 11월 20일자, "Frappé par la crise, Peugeot-Citroën supprime 3 550 emplois" 참조.

9) 르몽드 11월 27일자, "Face à la forte poussée du chômage, Paris prépare un plan de relance" 참조.

결국,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신속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적 입장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량해고사태 예방’을 위해 꺼내든 카드인 부분실업제 규제 완화는 노사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몇 주 내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인 Medef는 정부가 규정화할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조건으로 협상 개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노동조합 CGT는 이번 개편과 관련하여 규제완화 부분은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명확히 한 반면, 근로자를 위한 부분인 보조금 인상 관련 사항은 불확실한 노사협회의 결과에 맡긴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¹¹⁾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정책 발표와 함께 노사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이번 협의가 “반드시 연말까지 결론 지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새로 닦친 (경제위기)상황과 그 파급 효과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실업보험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논의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KLI**

10) 르몽드 11월 4일자, “Malgré le papy-boom, le chômage repart à la hausse en France” 참조

11) 르몽드 11월 26일자, “Nicolas Sarkozy veut assouplir le dispositif du chômage technique” 참조